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의원 181명 동참

민주·정의·기본소득당·무소속
서울시·대통령실 조사범위 포함
18명 특위 요구...오늘 본회의 보고
국힘 주호영 "수사에 지장 정쟁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9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도 동참, 요구서에는 모두 18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정치적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야권이 밀어부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을 위해서도 국민의힘이 결국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 3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을 제시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기타 의혹 등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방식으로는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선임하는 위원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특위가 구성되고 나면 조사계획서를 확정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한다. 야 3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 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참사 근본적 배경으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 과다 소요, 당일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지적된다"며 "참사 원인과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의 민주당 단독으로도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요구서 보고 후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경찰 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해 온 터라 본회의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계속 여당의 참여를 촉구하겠으나 끝까지 거부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야 3당만이 참여하는 국정조사가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을 칠 수도 없는 만큼, 결국 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제안을 받고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이런 형태의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수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야권이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9일 오후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11~16일 동남아 순방...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

프놈펜 아세안+3서 한중일 만남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4박 6일 동남아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출국,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새로운 아세

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한다. 다음 날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아세안+3는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이 함께 하는 역내 기능적 협력체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했다. 현재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뒤 2년 10개월 이상 개최되지 않고 있는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제안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3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

(EAS)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후 G20이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 G20 회원국인 경제 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서밋(14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15일에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식량·에너지·안보·보건세션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G20 계기 다른 정상들의 양자 정상회담 일정도 현재 조율 중이다. 서울에는 16일 오전에 도착한다. 윤 대통령은 17일에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18일에는 한-스페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야 후반기 국회 4개월여 만에 윤리위 구성

여야 후반기 국회 출범 4개월여 만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를 통해 '국회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윤리특위 위원을 교섭단체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운영 기한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말까지다.

이로써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위는 21대 후반기 국회가 출범한 7월 1일 이후 4개월여 공백 상태를 끝내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뒤늦게 구성될 전망이다. 21대 전반기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6월 30일부로 활동이 종료됐고, 이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윤리특위가 구성

되지 않은 상태였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국회 운영위원장은 "이 안건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국민의힘 송인석,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서면 동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의당은 윤리특위에서 배제된 점에 반발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이은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전에 윤리위 구성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비교섭단체는 철저히 배제하는 형식의 윤리위 구성 결의안이라 동의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이에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운영 과정에서 묘안 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며 "계속 협의해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웃기고 있네' '마음의 책임'...與, 잇단 설화 여론 악화에 난감

"野에 밀리면 안돼"기류도

'이태원 참사 참사' 이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잇단 '설화'가 비난을 사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간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이 제기됐다.

참사를 놓고 가짜뉴스나 여론 조작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좁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 인사들의 '헛발질'이 여론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적 대화였다고 하지만 주목도가 높은 국감장에서의 필담은 대통령실 기강해이로도 비칠 수 있는 문제라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두 수석이 해서는 안되는 실수를 한 건 맞다"고 말했다. 다만 "하지만 주호영 위원장이 부적절한 언사라고 퇴장시켰고, 수석들이 사과도 했기 때문에 해프닝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퇴장 조치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2019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용 안보실장의 질의응답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던 일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 수석을 퇴장시키지 않았고, 강 수석도 사과 안했다"며 "국회가 대통령실 수석들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됐다"고 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은 뒤 광화문 청사로 돌아갈 때, 국회를 보고 '검자(夫子)라고 한마디 했다는 말도 있었다'며 "국회의원을 했던 두 수석이 자기들끼리의 표현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인데 들리게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참사와 관련한 야당의 사퇴 요구에 '마음의 책임'이란 답변으로 논란을 키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당내 부정적 여론도 커지는 기류다. 전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박 구청장을 징계해달라고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11월 선착순 30분에 한하여 이장비 지원해드립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